

ISSUE & FOCUS

Newsletter 2015-7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사회학적 교훈

—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한국의 정신적 메르스 극복해야 —

민문홍 서강대 대우교수
(국제비교사회문화정책연구소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5월 20일 처음 발생하여 우리 국민을 놀라게 했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가 지난 주말을 고비로 차츰 진정되어가는 것 같다. 6월 29일(오전 6시 현재) 까지 확진 환자 수는 182명, 사망자 수는 33명, 치료중 환자 수는 54명이다. 이 사태가 종식된 후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 - 여기에는 반드시 인문사회학 전공 학자들도 포함 - 의 도움을 받아 관계부처 주관으로 좀 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백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제까지 의료선진국으로 알았던 한국사회의 낙후된 모습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구촌 시대에 후기 현대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메르스 사태는 한국사회 개혁을 원하는 인문사회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 사태에 대한 최근 한 달 동안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과 전문가들의 논평을 종합해보면, 중동지방의 토착 감기에 불과한 메르스가 한국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했다. 첫째는 의료행정적 원인이고, 둘째는 보다 포괄적인 인문사회학적 원인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메르스 사태가 엄청난 파문을 가져온 데에는 후자의 영향력이 더 컸다.

메르스가 ‘코르스(Korean MERS)’ 괴물로 변한 이유

감염내과 전공 의사들의 분석에 의하면, 메르스가 위험한 이유는 이것이 전염병이고, 높은 사망률 - 중동의 경우 40% - 을 지니고 있으며,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질병은 초반에 병원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 매뉴얼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이 점에 대해 전(前) 한국 의사협회장을 지낸 노환규 박사는 의료 행정적 관점에서 크게 네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메르스는 이미 2012년 발생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중요 정보를 건네받고 관련 전문가 회의까지 마쳤으나, 그 이후 회의 내용과 예방 매뉴얼에 대한 제작 및 홍보 절차가 정부에 의해 무시되거나 흐지부지 되었다. 둘째, 병원과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초기 대응 방식이 너무 안이했다. 셋째, 정부 내에 이 문제를 빨리 진단하고 초기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특히 메르스라는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과 초기 매뉴얼이 부재한 상태에서 목표 없이 너무 오랜 시간 우왕좌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유산인 ‘통치를 위한 비밀보호주의’가 전문가들의 적절한 시점에서의 개입과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병의 무차별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을 방해 했다. 즉, 전염병원균이 메르스이고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오고 또 그것을 외부로 퍼뜨린 감염병원들 - 평택 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시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정부관계자들이 대외비로 취급해 이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문제를 이러한 관점에만 제한시킨다면, 메르스 사태는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 의료의 비중을 높이고, 그 역할을 총괄 지휘할 독립적인 차관 정도를 두면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민들의 불안, 공포감, 정부에 대한 불신, 통치 엘리트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태도라는 변수들이 깊이 관여되어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시민들은 험난한 근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시민 각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반공동체주의 철학이었다는 것을 거의 무의식적인 집단기억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의 미성숙한 시민의식은 선진국이나 남미 같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메르스 치료를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분들의 치료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며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그 가족들까지 ‘왕따’ 시키는, 부끄러운 전염병 예방 풍속도를 보였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메르스라는 중동 전염병이 ‘코르스(Korean MERS)’라는 괴물로 변해 우리를 괴롭혔던 이유들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르스가 가져온 위기도 진정되면, 우리 국민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가 가져올 중장기적 파장은 클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도 국가 브랜드 훼손까지 포함시키

면, 20조 원 정도가 아니라 그 열 배가 넘는 천문학적 수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태를 인문사회학적 통찰력으로 엄밀히 분석해보면, 우리는 현재 선진국 문턱에 주저앉아 십여 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을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정부가 언제부터인가 목표도 방향도 없이 표류하듯 국가 전체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여기에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전후한 행정부 공무원들과 국책기관 연구소들의 혼란은 세종청사의 안이한 분위기와 이에 따른 거북이 행정 처리로 다양한 민원을 가진 국민들을 커다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기강해이는 입법부도 마찬가지다. 국회도 국민들에게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정도로 표류하고 있다.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분오열하는 정당의 리더십은 국민의 신뢰를 더 추락시켰다. 한국사회가 처한 현 상황을 보다 냉철히 표현하면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호가 세월호 처럼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침몰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언제부터인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이제 더 이상 사명의식이나 열정 없이 영혼을 잃어버린 조직들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내세우는 유일한 구호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내세운 국가의 역할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게는 더 사려 깊은 국정철학과 성찰이 요구된다. 유럽의 석학들이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1759)에 주목한 것은, 양극화로 치달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에 대한 설계도를 제시한 아담 스미스의 인문사회학에서 찾기 위해서였다. 이 경제학의 창시자에 의하면, 현대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는 공정한 게임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며, 거기에서 생겨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약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2) 공동체 이익과 개인 이익이 충돌할 때나 개인 이익의 과도한 추구가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될 때, 시민들 각자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다양한 이유로 생존경쟁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을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공감의 마음(측은지심)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심어주는 공감에 대한 감정교육이 필요하다. 아담 스미스는 벌써 오랜 전에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이 국가에 의한 정당한 게임규칙을 훼손할 때, 그 좋은 의도와는 달리 사회혼란과 기강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파했던 것이다.

둘째, 정부 부처의 보다 효율적 개혁과 후기 현대사회의 위험에 걸 맞는 새로운 조직화가 필요하다. 전국 의사협회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이 기회에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의료 행정 및 공공의료와 질병관리본부를 아우르는 차관 직을 신설하고, 기존의 복지담당 차관 부서에 사회복지와 국민통합을 담당하게 하며, 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함으로써 보건복지부를 명실상부한 부총리직의 위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국사회가 필

요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획 및 집행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한국식 복지모델을 마련하고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대다수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및 연금정책을 새로 기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전제조건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들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공공이익을 앞세우되 국민들 생활과 밀착된 정책을 만들려는 정부와 국회의 사명감에 입각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자세이다.

정신적 메르스 극복할 새로운 공론의 장 만들어져야

셋째, 조금은 엉뚱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후기 현대사회에 진입해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 메르스 감염’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의회를 포함한 대중매체와 시민단체들이 상대주의적 가치관과 포퓰리즘에 의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세기가 전체주의와 싸우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시기였다면, 21세기는 상대주의적 가치관과 포퓰리즘을 이겨냄으로써 더 성숙하고 업그레이드된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이러한 정신적 메르스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공론(公論)의 장이 더 이상 경직된 이념의 포로가 되거나 포퓰리즘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국민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참여민주주의’를 숭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에서 진실에 가까운 상식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공익을 구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주목한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체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추구해온 철학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존의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의회민주주의의 포퓰리즘 - 대표적 사례가 국회선진화법 - 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한국사회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넷째, 한국사회의 공익을 구현할 사회운동 조직이나 시민운동 조직이 지나칠 정도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사이의 이념적 대립에 근거한 철 지난 패러다임의 포로가 되어있다. 68년 5월혁명(프랑스 5월혁명)을 연상시키는 민주화 세력의 민주의식은 한국사회가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전모델을 마련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한국의 일부 관료집단과 대기업조직들은 여전히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거나 왜곡된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다. 따라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사이의 철지난 대립을 창조적 에너지로 활용하고 한국사회를 보다 창의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게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사회 영역과 공적 담론의 영역을 창출해 내야한다. 이것만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시민들의 낙후된 시민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딜레마를 깨는 데 열쇠를 쥐 유일한 집단이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지도자들과 인문사회학자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정치지도자들과 인문사회학자들의 삶

은 이러한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통 큰 지도자(statesman)가 되지 못하고, 험량한 정치이익만 추구하는 정치가(politician)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문사회학자들은 여전히 피에르 부르디외와 하버마스라는 유럽의 68년 5월혁명 세대 지식인들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한국의 정신적 메르스 감염 실태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가 메르스 사태를 포함한 현재의 정신적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아주 평범한 곳에 존재한다. 그것은 기존의 경직된 이념적 패러다임을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고 21세기형 시민교육을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식과 합리성과 배려의 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시민들과 지식인들을 인내심 있게 길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양극화 시대의 이념갈등과 집단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공동선과 새로운 실천적 도덕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도와야 한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의회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양식으로 계몽된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를 포퓰리즘으로부터 구하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두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국회와 지자체 의회에 선별해 보내는 작업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민주화 시대의 경직된 이념 속에 오랫동안 갇혀있어서 황폐화된 인문사회학을 올바른 학문적 기준과 학문공동체를 확립해서 정신적 메르스 감염 상태로부터 구하는 백신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신적 메르스 감염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여론을 공론(公論)과 구분하고, 정치와 사회문제의 복잡성을 국민에게 알리며, 문제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실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양식을 가진 시민들이 왜곡된 의사소통을 넘어 정론(正論)을 확립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